

2012 대선이슈: 일자리 창출

최승노 사무총장 (자유경제원)

2012 대통령선거는 2007년 대선처럼 경제 문제가 최대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¹이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문제는 여전히 경제야, 바보야”라는 슬로건이 다시 등장하는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 문제는 정치의 중심 과제이다. 2007년 대선에는 경제 살리기가 시대정신으로 떠올랐고, 당시 이명박 후보는 747공약을 내세워 국민을 설득했다. 2012 대선에서는 어떤 경제 이슈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대응, 복지와 재정 건전성의 충돌 해소, 양극화 완화, 일자리 창출, 성장전략, 내수 활성화, 물가안정, 부동산 살리기, FTA 확대 등 수많은 경제 이슈가 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없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들 이슈 하나하나에 부응하여 적절하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비전과 정책을 내놓는 일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민은 대선을 통해 미래를 결정한다. 짧게는 5년의 리더십과 경제정책을 선택하는 일이지만, 정책효과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결정의 파급력은 크다. 대선에 임하는 국민의 선택은 과거 지향적이기 보다는 미래지향적 성

¹ 헤럴드경제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선의 중심이슈로 경제 문제(55.3%)를 지목했다. 복지 이슈(28.7%)는 두 번째로 주목을 받았다. 복지도 크게 보면 경제 이슈에 포함하여 볼 수 있으므로, 경제 이슈는 가장 결정적인 고려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에 나서는 대통령 후보에게 가장 요구되는 사항으로 47%가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답변했으며, 지지후보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55.2%가 후보의 정책을 꼽았다. 헤럴드경제, 2012.1.2

향을 갖는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나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국민은 국가 발전의 비전과 민생 안정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를 달성할 정책 비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제 글로벌 세계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 점차 사회적 역량도 향상되어 투명한 사회, 원칙을 지키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 수준도 향상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인심을 쓰면, 국민이 좋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국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아끼고, 보이지 않는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성숙해 왔고, 국민은 많은 경험을 통해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고, 앞으로도 경제위기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가 발생했고, 유럽은 재정위기에 빠졌다. 미국의 자본주의와 유럽식 복지가 지속가능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는 개방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발전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내수침체, 일자리 부족, 고용불안, 자영업 부실, 재정악화 등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우리 사회에는 몇 가지 쟁점²이 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논의된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² "세계자본주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진로를 제대로 설정하려면 여야 간 정책·비전 경쟁이 12월 대선 때까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경제 불안감이 해소되고 희망과 자신감을 찾게 될 것이다. 만약 대선 승리만을 위해 여야가 또다시 정쟁과 계층 갈등만 증폭시키고 화합을 이끌어낼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강봉균, 여야, 이젠 정책 경쟁에 나서라, 중앙SUNDAY, 2012.4.29

첫째, 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존폐 논쟁을 벌였다. 앞으로 한·중 FTA와 한·일 FTA 같은 추가적 개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책 추진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 충돌해소 과제가 있다. 과거 복지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이번 총선에서는 줄어들었지만, 복지는 필연적으로 정부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어떻게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

셋째, 반기업정서를 포함한 경제민주화 문제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또는 차별해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논쟁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를 살피고, 정책의 내용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약자와 강자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분석하는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는 복잡한 현실경제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다. 국민에게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것이다. 이익과 혜택을 강조하면서 그 부담이나 세금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누군가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지출을 늘릴 수 없다. 단순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좀 더 진실성과 현실성으로 다듬어진 정책을 내놓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이다.

예를 들어,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의미가 있다.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복지는 경제에 부담을 주고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지속가능한 복지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비용을 써서 복지 지출을 늘렸다고 해서 그 복지가 유지될 수는 없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숨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복지비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항목 비용을 줄여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주장일 수 있다. 일회성 비용을 줄여 매년 쓸 수 있다고 과장해서도 안된다. 복지재원은 소비

세처럼 간접세를 늘려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1. 이명박 정부의 이념부재와 야권의 책임감 부족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를 실용정부라고 설명했고, 이념을 거부했다. 이념이 없는 정부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가 이념과잉의 시대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무(無)이념의 시대가 되었다. 정치지도자가 이념이 없다면 이는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이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정치노선을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서민 프렌들리'로 전환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꾼 것이라 이명박 정부 출범을 지지했던 다수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하는 불신이 확산된 것이다.

실용이라는 표현은 효율성을 높이는 일로 정치 지도자가 추구할 목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치지도자가 할 일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일이다. 자신을 먹여 살리는 체제를 탓하고, 경제발전의 동력인 기업을 원망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탈이념의 주장은 자신의 신념을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신념은 이념으로부터 나오고, 정치는 자신의 이념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다. 마치 우리 몸이 경제라면, 이념은 영혼과 같은 존재이다. 영혼이 결여된 정치에 국민은 감동하지 않는다.

올바른 이념에서 나온 제도가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이룬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저 경제성과를 올렸다는 정치적 치적은 정치적 명분을 얻기 힘들다. 아무리 경제성과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지표상으로 나아진다고 해도 국민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우려스러운 일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경쟁을 존중하기 보다 정부가 국민의 삶에 간섭하는 정부 주도의 질서를 강요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 달라는 떼쓰기 집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가 먹고 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라는 억지 주장이 난무한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야당과 진보세력의 무능력함이다. 이미 이념적 파산을 맞았던 구시대적인 주장과 정책에 끌려 다니는 정치를 하고 있다. 선진국의 진보세력이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 거듭 태어난 것과는 달리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은 역사적 책임을 방기한 모습이다.

2. 양극화에 대한 이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어려움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해법과 처방이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도 그 현상과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내용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전 세계가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양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오히려 양극화가 최근 들어 개선³되고 있어 희망적이다. 소득

³ OECD는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양행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1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구리아 사무총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소득분배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했음에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를 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2011년에는 2년 연속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평등 추세가 멈췄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2011년에는 2년 연속 개선됐다.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2009년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양극화 완화 추세가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양극화 악화의 장기적인 추세가 꺾였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다.

이처럼 10년 이상 지속되던 양극화 추세가 최근 2~3년 동안 꺾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성장정책을 중시했다. 평등을 강조하기 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양극화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극화에 대한 해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완화되고 중산층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또 취약 계층에게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소득을 재분배해서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3.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차이가 가져다준다. 과연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나라는 정치민주화를 이루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주

다고 경계했다. 양극화는 세계화, 기술진보 등 구조적인 요인 탓에 생기는 현상인 만큼 경제성장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연합뉴스, 2012.4.26

의 과잉을 걱정할 정도이다. 이제는 경제 분야에서 민주화를 이루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경제민주화를 지나치게 정치논리로 해석하다보면 자칫 경제분야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도 있다.

경제 문제는 경제원리에 충실한 해법으로 풀어야 부작용도 적고 효율적이다. 만약 경제문제를 민주주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문제가 정치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경제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지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소 경제원리에 벗어나더라도 정치적 필요에 의해 경제문제에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늘 일어난다. 다만, 경제민주화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로 개인의 권리를 대체하려 하거나 경제의 효율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국민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지도자를 선택하고 정책을 선택한다. 국민은 소비행위와 생산행위에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이다. 이러한 과정에 제3자가 간섭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제하고 대신 선택하려는 행위는 정부개입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국민이 무지하니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고 제3자가 대신 결정해 주겠다는 태도는 오만이며 독재의 또 다른 형태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국민이 선택하는 것을 무지한 행동으로 몰아가면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경제문제인 누가 사업을 하고, 누가 생산을 할지를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 사업은 누가 하고, 이 물건은 어디서 누가 팔라고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국민이 소비선택권, 생산선택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어야 경제의 효율성

도 높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다는 말을 앞세우면서,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국민위에 군림하려 규제와 통제를 강화한다면 이는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과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과 소비자의 주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는 체제이다.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야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다. 국민주권, 소비자주권을 침해하면서 정부주권, 이익단체주권을 옹호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실패이기도 하다.

4.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세금 개혁

한 나라가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은 쉽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 유럽의 나라들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세계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건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늘리는 일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지출이 방만해 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상성 경비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표를 얻어야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재원마련을 고려하지 않고, 혜택만을 강조하는 정치실패를 야기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먼저 정치 공급자인 후보자가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생산하는 행위를 막는 일이다. 모든 정책 제시에 따른 재원마련을 구체적으로 함께 발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규모가 드러나고 국민은 그 비용의 규모를 인식하여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자연스럽게 세입의 증가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체 국민의 부담수준은 증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반드시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많은 선진국들이 '재정준칙(fiscal rule)'이라는 법적 장치를 가지고 정부의 지출행위를 억제하고 있다.

대선에서 내놓은 선거 공약은 대규모 사업인 경우가 많다. 그 사업의 실행 첫해에는 지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신뢰성있는 기관의 장기적인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예산 총액이 제한⁴되어야 한다.

선거 공약을 실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세출을 늘려야 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두어야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른 예산을 아껴서 새로운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식의 임기응변식 책임회피는 곤란하다.

세금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위한 수입이다. 세금 징수의 방식은 보편타당해야 하며, 다수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정책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심지어 벌금처럼 부과하는 세금은 사회적으로 해롭다. 과거 종합부동산세가 부유세로 논란을 일으키고, 사회적 비용이 막대했던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다시 부유세 성격의 세금을 새롭게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면 이는 또 다시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인세처럼 세율인하를 고려해야 하는 세금도 있다. 전체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경쟁 국가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세금체계는 복잡하다. 세무 전문가조차도 혼란

⁴ 현진권(2011), 참조

을 겪을 정도로 복잡한 수준이다. 이러한 조세구조를 단순화하는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5. 지속 가능한 복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모두 발전하고 향상된 미래를 만든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계층도 있게 마련이다. 국가는 세금을 거두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게 된다. 문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그렇게 만족스러울 리가 없다는 점이다.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욕망은 계속 커지게 마련이어서 국가가 어려운 계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지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는 좋은 것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복지가 무조건 좋다거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맹목적인 사고는 곤란하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를 꿈꿨지만, 그 폐해가 컸음을 상기해야 한다.

나라가 부유해지면, 복지를 늘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커진다. 정치인들은 인기를 좇아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하고, 사람들은 복지를 공짜로 인식해서 무조건적으로 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로 향하는 오류를 범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도 그 이유였지만, '복지국가가 선진국이다'라는 오해도 문제였다. 사실 복지국가와 선진국을 동일시 할 이유가 없다. 선진국은 복지를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라라서 더 풍족한 복지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복지를 늘려야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지국가가 꿈의 국가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유지되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또, 복지지출은 속성상 확대하기는 쉽지만 축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번 증가하기 시작한 복지는 국가의 재정안전성을 위협하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복지 지출의 규모가 비대해져 경제위기에 직면한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복지국가는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복지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일할 의지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먹여 살려 주는데다가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간다. 즉 일을 하나 안 하나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일할 의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나라는 복지중독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취약 계층에 집중적인 지출을 한다고 해도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일을 통해 최저생계 수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방식도 시장친화적이어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개인과 국가 모두에 유익하다. 세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바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셈이다. 정부 위주의 복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복지보다는 민간의 활동을 통해 복지가 필요하지 않도록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월한 방식이다. 그 결과로 정부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일자리를 통해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복지 수혜자의 수는 줄어든다.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이 사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말로 복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낙담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자립심을 키우고 스스로 돕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겠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필요한 복지는 세금을 거두어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 지출은 획일적일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은 획일적으로 배급하는 형태로 복지의 본질을 훼손한다. 모두에게 똑 같이 배급하겠다는 것은 정부에 의한 계획경제 처럼 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복지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보조하고 국민의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

또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면, 그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 번 늘어난 복지지출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러려면, 변동성이 큰 세금으로는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세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 지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길이다.

6. 기업정책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었지만, 공약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기업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이 걱정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인기를 좇아 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건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에 불과하다.

기업 때리기로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의 삶이 좋아 질 것으로 믿는 정치인이 있다면, 큰 오산이다. 세계 어디에도 기업 때리기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다. 대기업

이니까 이 정도 괴롭힌다고 설마 문제가 있겠냐며 기업 때리기에 나선다면 그것은 치명적 실수다. 그 부정적 효과는 단순히 기업의 이윤을 줄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자리를 줄이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빼앗아 간다. 특히 대기업을 부정시하는 정책은 오히려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 전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과거에도 정치인들은 정권의 도덕성을 높이려 할 때나 선거를 치러야 할 때 기업인과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곤 했다. 권위적 정치시절에나 있음직한 불합리한 정치적 관행이 대한민국에서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은 유감이다. 이는 정치인의 철학 부재이며, 이념의 빈곤이고,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과 기업가를 경제 불황과 경제정책 실패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일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정치인과 정부로서는 자신의 잘못을 떠넘겨 정치적 타격을 피해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누적되면 돌이키지 못할 참화가 발생하게 된다. 반기업 정서가 반기업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 경제는 경쟁력을 잃는다. 우리 사회는 대기업을 재벌이라고 부르며 대기업을 억제하는 목표를 정책화한 결과로 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 국제 경쟁의 주역들을 스스로 폐기하고, 후진국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결과를 스스로 없앤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하나씩 늘려간 반기업 정책들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의 부채가 나쁘다며 부채비율을 강제로 제한하기도 했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문어발식 경영이라며 죄악시하고, 재벌해체를 추구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가 자칫 실패라도 하는 날에는 정치적 책임 논란에 휩싸여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악조건에 처했다. 기존의 대기업은 몸을 사리고, 새롭게 대기업으로 커 나갈 중소기업은 성장할 이유가 없어졌다. 결국 새로운 대기업은 나오지 않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기업이 사회의 악으로 몰리는 사회에서 새로운 대기업은 나오기 어렵다. 대기업에 대한 질서와 정치인들의 오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신나게 사업을 벌이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대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다듬는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기업이 성장해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 지금처럼 반기업정서를 높이는 기업 때리기로는 미래가 없다.

출총제 부활과 재벌세를 경제민주화의 주된 내용으로 거론하는 주장이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될 수 없다. 국민의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것은 민주화와는 무관한 반기업규제일 뿐이다. 대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억제 정책이 우리 경제의 성장 원동력을 제약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면,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내놓은 지원정책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렵게 만든다.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의 수는 늘어나고, 대기업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제조업 기준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체는 2001년 이후 약 7,200여 개 증가한 반면(2009년), 2001년 917개였던 대기업은 2009년 기준 595개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⁵이다.

중소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조업 일자리 279만여 개 중 약 77%에 달하는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생산액 역시 대기업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증가의 속사정을 보면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양적 팽창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이후 전체 중소기업체 수는 증가하였지만, 종업원 300인 이상의 중기업 기업체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대기업과 중기업 사

⁵ 김시정(2012), 참조

업체 수는 줄어든 반면, 영세한 소상공인 중심의 제조업체 수가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소상공인 중심의 양적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보호주의에 치우친 중소기업정책과 대기업 규제정책에서 나온 부작용의 한 단면이다. 대한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는 순간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160여 각종 조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이 모두 없어진다. 반면 대기업에게 가해지는 190여의 각종 의무조항이 부과된다. 기업이 규모를 늘리고 투자를 확장해 가면 혜택은 줄어들고 규제만 가중되는 구조에서 기업들이 더 성장할 인센티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작은 규모를 유지할 유인만 존재하게 된다.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기업 스스로 성장하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작은 기업에게 계속 작은 규모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큰 기업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억누르는 정책 구조를 갖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가 된다. 중소기업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게 되고, 대기업은 각종 규제에 발생한 비용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성장에 따른 단계별 지원 및 성장 장려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일정기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게는 지원을 중단하는 지원졸업제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해 왔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이 새로운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투자제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의료, 방송 등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대기업의 탄생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로이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공공의 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대선에서 기업때리기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경제침체와 맞물려 전방위적 압박이 예사롭지 않다. 여야 후보 모두 경제 문제와 정책실패를 대기업에 떠넘기고, 대기업을 억압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경제는 어려운데 대기업 혼자서 잘나가지 말고 좀 베풀면서 살라는 뜻으로 완곡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표현과 방법이 과격하다 못해 정책까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푸는 일을 강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규제를 통해 대기업의 경쟁력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 대기업은 세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다. 애플과 경쟁하는 삼성전자, 도요타자동차를 쫓는 현대자동차, 세계의 가전 브랜드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의 활약은 눈부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질시와 질타의 대상이 된다. 한 마디로 동네북 신세다. 권력 앞에서 대기업은 과거의 사농공상 시대의 상업 천시 풍토를 다시금 느끼고 있다.

경제상황이 어렵고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경제발전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

선거 공약은 실천하기 어려운 정책보다는 손쉬운 편의주의적 정책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규제는 정치인들이 유통업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풀려는 노력

보다는 대기업에게 부담을 늘려 쉽게 해결하겠다는 전형적인 정치실패의 사례를 보여준다. 실제로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쇼핑 편리성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어려운 일이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생색도 안나고 힘든 일을 하기 보다는 쉽게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대형마트의 이용을 불편하게 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규제위주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자신이 구매할 때는 재래시장을 외면한다. 이러한 말과 행동의 괴리 현상은 왜 일어날까. 심정적으로 동정이 간다 하더라도 막상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재래시장을 살릴 방안은 무엇일까.

자본을 활용해 재래시장을 복합 개발하는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있는 분야를 살리면서 재래시장을 재개발해 새로운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등 새로운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복합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 새마을운동의 성공방식을 따라 스스로 변신하려고 노력하는 재래시장에 대해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7. 개방화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한 성장전략으로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왔다. 앞으로도 개방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은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미국, EU를 비롯하여 인도, ASEAN 등 거대경제권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EFTA, 페루 등 강소국 혹은 자원부국과 FTA를 넓혀왔다.

앞으로 중국과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와의 FTA 추진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다시 한 번 요구되는 시점이다. FTA는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개방 및 투자 증대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방의 확대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 생산성 향상의 효과도 가져온다. FTA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법률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FTA를 통한 서비스산업 개방이 그 계기를 마련하여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 투자 및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 가운데 특히 의료, 교육 분야의 규제완화, 법률, 회계, 세무, 의약 등 전문 분야의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FTA를 통한 개방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노동의 효율적인 부문간 이동을 제약하는 노동관련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저해하는 노사관계 규제를 들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제도, 해고제한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동조정비용의 유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기를 유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노동관련 효율성 제고에 노사정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FTA 개방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관련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호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의 기업 규제는 글로벌 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이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기업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공정거래법에 있는 경제력집중 억제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은 우리 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토지이용규제도 FTA를 통한 개방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된다. 중앙정부가 국토의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토지이용규제는 토지 분야의 효율성을 낮추고 이용의 경직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어 왔다. 토지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권화하는 개혁이 요구된다.

또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농업 부문의 효율성을 제약하여 개방에 통한 농업 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취업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농지의 양적 보존 정책으로 농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농가의 생활여건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어 농업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WTO, DDA, FTA의 추진에 따라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주곡자급정책, 농지보전과 경자유전 원칙 등 농업보호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세계화와 시장개방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것이다.

8.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누군가 소비를 하려면 그 물건을 팔기 위해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야 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소비 과정을 통해 일자리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고용을 파생수요라고 한다. 만약 소비자가 다른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을 바꾸면 기존 상품을 만들던 사람은 필요 없어지고, 다른 상품을 만들 사람이 필요해진다. 소비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일자리가 새로 생기기도 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일자리의 대부분은 농사짓는 일이었지만, 산업화를 거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많아졌고, 지금은 서비스업 일자리의 비중이 커진 상태다.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일자리로 옮겨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소득도 높아진다. 소득 증가는 다시 소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최근 젊은이들은 취업문이 좁다며 아우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8% 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일본이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 프랑스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급여가 높은 일자리에선 사람이 몰려 취업난이 발생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는 인력난이 발생한다.

무역을 통해 해외 소비자가 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글로벌 기업이 많게 되면 고임금의 일자리도 많아진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회는 활력이 없다. 해답은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정부들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본유치 경쟁에 열심이다.

어느 나라나 일자리를 늘리고 싶어 한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기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본 유치 경쟁에 나서기도 한다. 여야 정치인과 언론, 국민 모두가 일자리 창출이 소중하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일자리는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지시하면 만들 수 있을까? 강력한 독재국가들이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일자리는 민간의 자율적 투자활동에 의해 늘어난다. 경제발전이 빠른 나라에서 일자리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 1%가 늘어나면 5만~6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요즘 연간 4%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한다. 약 20만~24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경제가 1% 성장하면 일자리가 8만~10만 개가 늘었기 때문에, 5%의 성장률을 달성하면 신규로 일자리를 얻으려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취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비슷한 성장을 해도 신규 취직 희망자의 절반도 직장을 구

하기 어렵다.

일자리의 수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질적 내용도 문제다. 대졸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취업 희망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다. 조직에 자본이 축적돼 있어 급여도 높고, 지식이 축적돼 있어 경험적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대부분 그런 근무 여건은 대기업이 제공한다. 하지만 기존의 대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대기업이 출현해야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대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된다. 이처럼 쉬운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이를 실천하는 나라는 드물다. 실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상당기간 조성해 많은 대기업을 만든 나라조차도 계속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지 못한다.

인구가 1,000만 명 수준에 불과한 스웨덴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시기에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나왔다. 자동차회사인 볼보, 전자회사인 에릭슨, 자동차 회사 사브,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 트럭회사인 스카니아 등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 이후로는 새로운 대기업이 나오지 않는 경제구조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기업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기업가의 열의가 넘쳐나고, 언론과 정부는 성장하는 대기업을 칭찬하고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하려고 애썼다.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인재를 찾았다.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경쟁하면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혜택이 커지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기업들은 사라져갔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중소

기업에 안주하도록 유인을 제공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동안 누렸던 많은 혜택과 보호를 포기해야 하고, 오히려 수많은 규제와 질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중소기업조차도 치열한 도전과 성장보다는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진정한 해법은 무엇일까. 신규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과 기존의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기업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일이다. 면허, 승인, 인가 등 기업의 진입 규제를 풀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식품제조업, 음식업, 화장품제조업 등에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면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작은 기업의 성장 노력도 일자리를 늘린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영세성은 저고용과 저부가가치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대형화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 사실 해고가 쉬워야 고용도 늘어난다. 한번 근로자를 채용하면 평생을 보장해야 하는 노동환경에서 어떤 기업가가 마음 놓고 고용을 늘릴 수 있겠는가. 지나친 정규직 보호가 일자리 확대를 억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서비스업에서 가능하다. 현재 서비스업의 상당 부분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갖고 있다. 그만큼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그 분야의 경쟁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진입규제를 해소하면 의료, 교육,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데 특히 의료산업은 유망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다면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소득은 그 분야가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이루었을 때 가능하다. 어떻게 최고 수준으로 생산성을 올릴 것인가? 바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다. 경쟁을 통해 대기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비결이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또 중소기업을 고부가가치형으로 탈바꿈시키는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시장의 선택을 통해서만 튼튼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이 소비자를 바라보고 경쟁해야지 정부의 보호와 지원금을 바라보고 경쟁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를 키운다.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는 함께 커지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을 대신해서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해법은 당장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 내놓는 실업 대책은 경제를 왜곡하거나 낭비적인 일을 만든다.

대기업에게 신규 채용을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 대기업 없이 중소기업만 계속 늘린다고 실업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부실한 중소기업만 양산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자본을 줄이는 가치파괴적 일이 된다.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경쟁의 주체는 글로벌 기업이다. 더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어야 우리 경제도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 도전과 모험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과격하 노동단체의

불법적 투쟁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꺾을 수 있다. 노동단체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새로운 사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크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⁶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경영상 불가피한 고용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을 확대, 또는 자율화하는 것이다. 셋째, 파견근로 가능업종의 제한을 폐기하고 파견기간제한을 확대, 또는 자율화하는 것이다. 넷째, 임금피크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불법투쟁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경제의 부담을 늘린다. 오히려 정부 지출을 늘리다 보면, 세금부담을 늘리고 민간경제의 위축을 불러와 경제 전체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장기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씩씩이를 키울수록 경제의 활동성과 잠재력은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민간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경쟁상대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경쟁과 개방의 압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고히 하고 법치를 지켜나가야 하며, 민간의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개방과 자유무역은 이러한 경제활동의 활동성을 강화한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될수록 삶은 넉넉해진다.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비효율적 규제들을 개선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곧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⁶ 이상화(2012), 참조

강봉균(2012), 여야, 이젠 정책 경쟁에 나서라, 중앙SUNDAY

곽은경(2010a), 우리나라 정부와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교, CFE Report, 자유기업원

곽은경(2010b),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 이행의 시장친화성 분석

권혁철·김상겸·우석진·조동근·최승노·최창규·현진권(2011), 포퓰리즘의 덫, 나남

김시정(2012), 규모에 따른 기업규제 현황과 기업환경 개선 방안, 정책제안, 자유기업원

김이석(2010), 왜 다시 자유주의인가,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용(2012), 4.11 반(反)시장 선거공약의 귀결, CFE Viewpoint, 자유기업원

김은경(2012), 농업, 보호정책에서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전환해야, 정책제안, 자유기업원

박기성(2011), 노용산업(勞融産業) 육성으로 고용을 늘리자, 정책제안, 자유기업원

송원근(2012), FTA 개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제안, 자유기업원

스티브 포브스·엘리자베스 아메스 저/김광수 역(2011),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아라크네

이상화(2012),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정책제안, 자유기업원

전삼현(2012), 선거철...다시 시작된 대기업 때리기, CFE Viewpoint, 자유기업원

조주현(2011), 전세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와 공급확대 대책, 정책제안, 자유기업원

최승노(2007), 2007년 대통령후보 공약평가, CFE Report, 자유기업원

현진권(2011), 재정준칙을 법률로 만들자, 정책제안, 자유기업원